高 지지자 30~50% "이명박 지지"

한나라당 후보군으로 절반 이상이 이동

40% 유보…'민주개혁세력 통합' 메시지

■ 고 건 지지표 어디로

고 건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구심점을 잃은 고 전 총리 지지자들의 '표심'의 향방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고 전 총리의 대선포기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고 전 총리 지지자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등 한나라당 후보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 후보군 가운데서는 고 전 총리와 지역적 기반이 겹치는 정동영 전 의장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광주일보가 인터넷 패널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고 전 총리의 대선 불출마로 가장 이득을 보는 후보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45.3%을 기록, 수위를 차지했으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14.3%),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12.8%) 순이였다.

같은 날 실시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고 전 총리 지지층이 이동한 곳은 이명박 42.6%, 박근혜 24.6%,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2.9%, 정동영 전 의장 1.9%, 순으로 나타났다.

'고 전 총리의 불출마로 어느 대선 주자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명박(51.9%) , 박근혜(20.5%), 정동영(7.4%) 등의 순으로 답이 많았다.

또한, SBS의 여론조사 결과, 고 전 총리 지지자들 가운데 30.6%가 이 전 시장 쪽으로 이동했고, 16.2%는 박 전 대표, 7.1%는 손 전 지사 쪽으로 옮겨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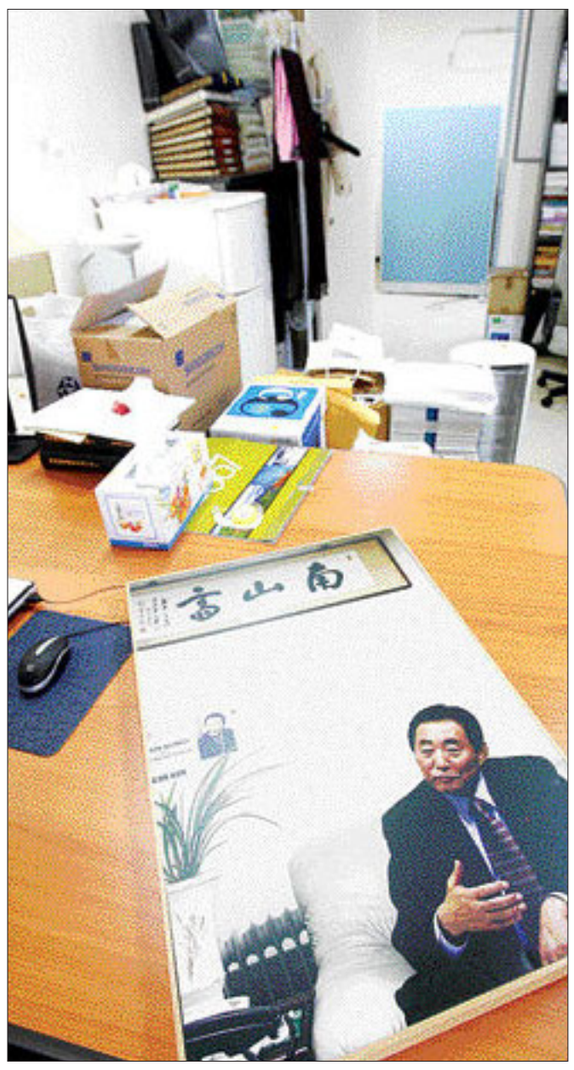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고 전 총리 지지층 가운데 35.1%가 이명박 전 시장 쪽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 박근혜 7.0%, 손학규 7.0% 등 한나라당 후보군으로 50.6%가 옮겨간 반면, 여권 후보 가운데서는 정동영 5.3%, 한명숙 총리 3.5%, 강금실 1.8% 등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여권에서는 범여권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고건 지지표가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군으로 흘러갔다며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고 전 총리 지지층 가운데 40% 가까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여권의 대선 후보 구도로는 대선에서의 반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 '민주세력 대통합'을 이루라는 여론의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여권 주자로는 정동영 의장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의 지지율로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판명났다는 점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고건 지지표의 정동영 전 의장 유입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새로운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의미 있는 규모의 고건 지지표가 한나라당 후보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전 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날인 17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 있는 고건 전 총리 사무실 옆 자원봉사자 사무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건 前총리 호남서 칩거

차기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고건 전 총리가 호남 지역에서 칩거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전날 지지자들의 반대로 기자회견 없이 서울을 떠난 고 전 총리는 호남 지역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고 전 총리는 당초 2~3일 가량 지방에서 머물다가 상경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바꿔 지방체류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이 측근은 "고 전 총리가 호남지역에 지인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머무를 곳도 많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서울에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 "손학규 영입 위한 권력 음모"

고건 불출마 배경 뒷말 무성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각종 뒷말이 난무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최근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여권 진영에선 가장 유력한 차기주자가 갑자기 중도하차를 선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특히 고 전 총리의 사퇴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짙은 한나라당에서 각종 음모론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정진섭 기획위원장은 17일 "고 전 총리가 그만둔 데는 표면적 이유와는 달리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고 전 총리는 단순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물러난 사람이 아니다. 권력의 작용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손학규 카드'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다소 '황당한' 분석까지 나왔다. 여권이 제3의 후보로 진보 성향의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영입하기 위해 사전 정리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고 전 총리가 정치자금과 관련된 '약점'을 잡힌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고 전 총리가 희망연대와 미래와 경제 등 외곽단체를 결성하고, 대선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은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측근들 사이에선 고 전 총리의 건강 문제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고, 불출마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와 함께 정치활동에 대한 가족의 반대도 불출마 결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이젠 實利다

〈6〉외면 당하는 폭력시위

"쇠파이프 이제 넌더리"

폭력 집회로 인한 후폭풍(後暴風)이 거세다. 시민들은 이제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 '알맹이 빠진 폭력 집회'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2일 오후 광주 시청 앞.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 시·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1만 2천여 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10여m의 거리를 두고 맞닥뜨렸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된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손을 높게 치켜들며 'FTA 반대'를 외쳤다. 절규하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시장과의 면담이 무산되자 흰 마스크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뛰어나왔다. 그들은 농민들이 아니라 훈련된 전문 시위대로 보였다. 그들은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를 경찰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일부는 시청 앞 보도 블럭을 깨뜨려 시청을 향해 던졌다. 불깡통도 동원됐다. 청사를 부수고서라도 시청 안으로 들어가 시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이었다.

反FTA 폭력시위 혹독한 대가

그러나 정작 눈물로 호소하던 대다수의 농민은 사태가 험악해지자 저만큼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애절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오메오메~이리 오쇼. 다치겄소." 당황한 농민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다.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한 뒤, 농민들은 집회의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집회 주최측의 명분도 이미 사라져버렸다.

폭력의 대가도 컸다. 시위 가담자 6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시는 농민 등 42명을 대상으로 2억1천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민 100여 명은 무기한 현물 배상 투쟁에 들어갔다. 악순환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해 4월27일 오후 순천. 율촌산단 고갯길 쉼터 앞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천500여 명이 모였다. 현대 하이스코 해고자 120명 복직, 사측의 노조원 상대 72억원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는 집회. 회사 측의 요청에 경찰은 언덕 중간에 컨테이너박스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의 진입을 막았다. 시위대는 회사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돌멩이와 쇠파이프가 다시 등장했다. 유혈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상황은 일단락됐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1월~12월) 광주·전남에서 열린 집회 1천475건 가운데 신고된 집회는 약 95.5%(1천408건), 미신고 집회는 약 4.5%(67건)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5%(73건)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됐다.

시민 공감할 시위문화 정착을

대부분의 폭력집회 참가자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위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performance)'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퍼포먼스란 바로 폭력을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집단 민원을 넣고, 1인 시위를 벌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로 폭력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시민 조모(36·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폭력을 쓰면 이젠 폭력집단으로 매도된다"고 했고, 최모(56·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적어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개혁연대 류동훈(36) 사무처장은 "직설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통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이 통하는 시대"라면서 "'민주화의 성지' 답게 집회도 문화 공연 등의 형태로 바꾼다면 시민들에게 부드럽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지난해 11월22일 광주시청 앞 시위 모습.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운동본부 시·도민 궐기대회'에 참가한 1만 2천여 명의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